

###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손해배상

보호중인 정신질환자가 오전에 이미 한차례 아파트 내에서 불을 질렀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저녁에 재차 불을 질러 결국 이웃집에 화재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보호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 〈사건의 개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정신질환자 A씨는 2016년 7월 4일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후 아파트로 돌아와,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수건과 형겅, 부탄가스를 쌓아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아버지는 아파트로 가서 불을 꺾고 아들인 A씨를 안정시킨 다음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다시 A씨와 대화를 하였으나, 이후 방으로 들어간 A씨는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렀고,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불을 끄려고 하자 A씨가 톱과 망치를 들고 이를 방해하여 스스로 불을 끄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불은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에 옮겨붙어 해당 호수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그슬렸고, 이 집에 거주하던 이웃 두 명은 연기를 흡입하여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률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21조 제1항(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 제22조 제2항(보호의무자의 의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

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관례는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하 ‘부양의무자 등’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부양의무자 등에게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양의무자 등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정신질환자의 생활이나 심신의 상태 등과 함께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정신질환자의 재산 관리 관여 상황 등 정신질환자와의 관계, 정신질환자가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응하는 보호와 치료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양의무자들에게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톱과 망치로 위협하며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A씨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